

# 전남도-도교육청, 광주·전남 행정통합·교육혁신 협력

## 김영록 지사·김대중 교육감, 대통합·교육 대전환 공동선언문 발표

전라남도과 전남도교육청이 8일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날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혁신 방안과 특별법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를 넘어 미래를 지어 이 주도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교육청이 행정통합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법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김대중 교육감의 지지와 동참에 감사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민은 물론 교육혁신과 미래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오른쪽)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8일 도청 접견실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전남 대통합이 라는 대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교육은 다양성을 중시 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통합을 이루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 남구,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 운영

### 2월부터 매주 금요일 기초·활용반 교육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익한 스마트폰 활용법을 교육하는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남구는 8일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본격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는 오는 2월 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씩 펼쳐지며, 교육 프로그램은 초급 과정을 배우는 기초반과 고급 과정을 학습하는 활용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반과 활용반 수강 기간은 1개월 과정이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매월 각각 20명씩 선착순으로 받는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챗지피티와 제미니AI 등 AI 프롬프트 활용법을 비롯해 모바일 쇼핑, 티머니 GO 앱을 활용한 버스표 예매, 그림 카드 만들기,

동영상 편집 앱 사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학습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무더위가 극성인 8월을 제외하고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한다.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매일 접수 시기에 맞춰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서 참가자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되기 때문이다.

참가자 모집은 매일 25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구청 홍보실 통신망 전화(☎ 607-3741~3) 또는 사무실 방문 신청으로 접수한다.

다만 25일이 주말·휴일에 해당할 때는 24일 또는 26일에 신청을 받는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려는 주민들이 매우 많다"면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유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 북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확보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한 지자체

를 선정해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 실적 ▲주민 편의 제고 ▲홍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북구는 광주 5개구 중 가장 많은 지급 대상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주민 불편과 혼선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난 7월 본격적인 소비쿠폰 지급일에 2주 앞서 9개 부서와 27개 동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꾸려 원활한 지급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의신청 처리,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각종 민원 응대 등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북구 효죽공영주차장 2층 공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괄

운영실'을 조성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던 지급 첫 주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직자와 자원봉사자를 추가 배치해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거동이 불편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주민 548명에게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인정 받았다. /송현근 기자

### 서구, AI 전문가 김상균 교수 초청 아카데미 개최

#### 오는 13일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주제로 강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구청 들불홀에서 AI 전문가인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제126회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김상균 교수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AI 비즈니스'를 강의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삼성인력개발원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휴머노이드', 'AIx인간지능의 시대', '메타버스'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시대적 담론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김 교수는 AI와 메타버

스 등 복잡한 개념을 일상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현실감 있게 전할 계획이다.

서구 아카데미 참여는 서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서비스 또는 전화(062-360-7769)를 통해 가능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강연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아카데미는 이창용 도슨트, 이세돌 교수, 가수 김장훈 등 각 분야의 최고 명사를 초청해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석우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주민 반발·주도권 갈등에 멈춘 통합 행정통합에 성공한 사례와 달리 주민 반발과 정치적 이견에 부딪혀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남 서해안의 이른바 '무안반도' 행정통합 논의 역시 수차례 제기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994년 목포시의회는 '지역 침체 탈피와 발전 기틀 마련'을 명분으로 목포·무안 통합을 공식 결의했으나, 목포 중심의 개발을 우려한 무안군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같은 해 목포·무안·신안 3개 지자체 통합안으로 논의가 확대됐지만, 찬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결렬됐다.

이후 2012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 중심지 설정과 개발 이익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2020년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목포·신안(先)통합을 제안하고, 2023년 박 전 군수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통합 추진에 합의해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진전이 없다.

전북 전주와 완주군 역시 교통·경제·생활권은 상당 부분 겹쳤지만, 완주군 주민들은 통합 이후 농촌지역 자치권 약화와 재정 배분 불이익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권한 배분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고, 결국

주민투표를 넘지 못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광역 통합 논의가 오가던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간 이어졌지만, 아직 실질적인 통합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부울경은 2020년대 초 메가시티 구상을 통해 광역 교통·산업 협력을 추진했으나, 지자체장 교체와 정치적 환경 변화로 동력이 약화됐다. 대구·경북 역시 공동 의제 구성과 특별법 논의까지 진행됐지만, 권한 배분과 행정 체계 문제를 두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활발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광주·전남도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된 이후 40년 새 모두 세

차례(1995~1998, 1999~2005, 2020~2023년)에 걸쳐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첫 두 차례는 전남도청 이전 문제와 맞물려 통합 논의가 제기됐으나, 청사 소재지와 공직사회 반발, 주도권 갈등 끝에 무산됐다. 세번째 논의는 공공항 이슈와 중앙 정부의 지원 부족, 여기에 법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행정통합이 성사된 지역은 통합 필요성과 효과가 비교적 명확했고, 주민 동의와 단계적 설계가 뒷받침됐다. 반면,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권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했다는 분석이다. /전광훈 기자

